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4분기 사회서비스 최신 동향 안내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LATEST TRENDS IN SOCIAL SERVICES
FOR THE SECOND QUARTER

PASS
2025 - 4

Table of Contents

01. 통합돌봄 개요

02. 통합돌봄 예산 구조

03. 통합돌봄 추진체계

04. 전북특별자치도의 통합돌봄 준비

05. 향후 정책 및 정책적 시사점

통합돌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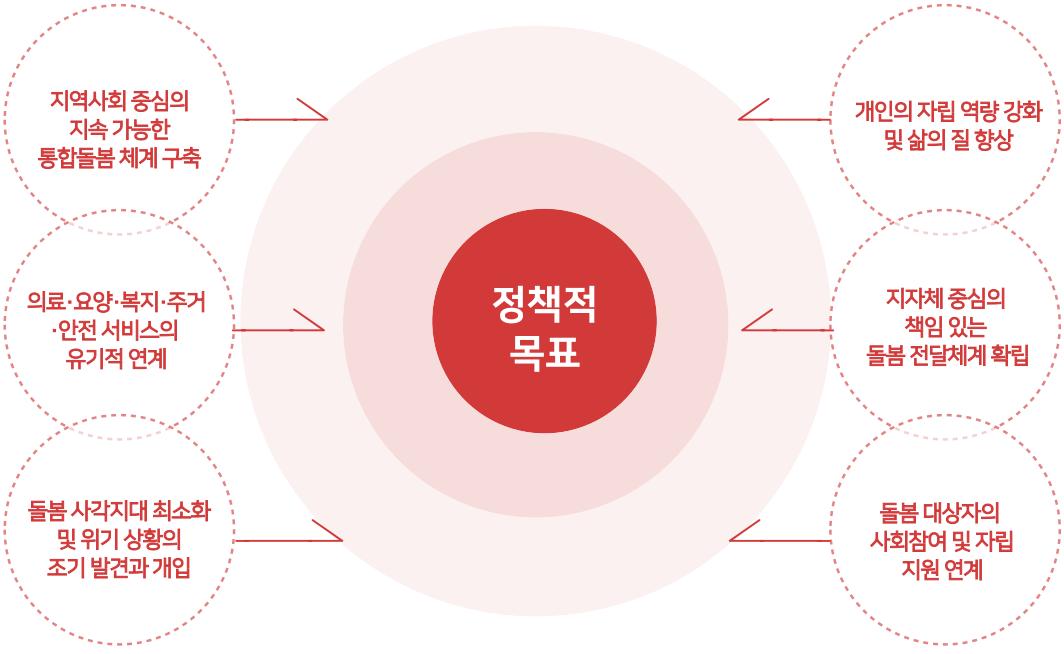
통합돌봄의 정의

통합돌봄(Integrated Community Care)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안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들을 하나의 계획 안에서 연계·조정하여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통합돌봄은 단순한 서비스 묶음이 아니라, 주민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며, 행정·보건·복지·안전·고용 영역 전반의 협업을 전제로 하는 종합 정책이다.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됨
- 만성질환, 중증·복합 욕구를 가진 돌봄 대상자 증가로 기존 의료·요양 중심 체계의 한계 노출
- 가족 돌봄 기능 약화, 1인 가구·노인 단독가구 증가로 공공 돌봄의 책임 확대 필요
- 병원 중심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입원 증가 및 의료비·재정 부담 가중
-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자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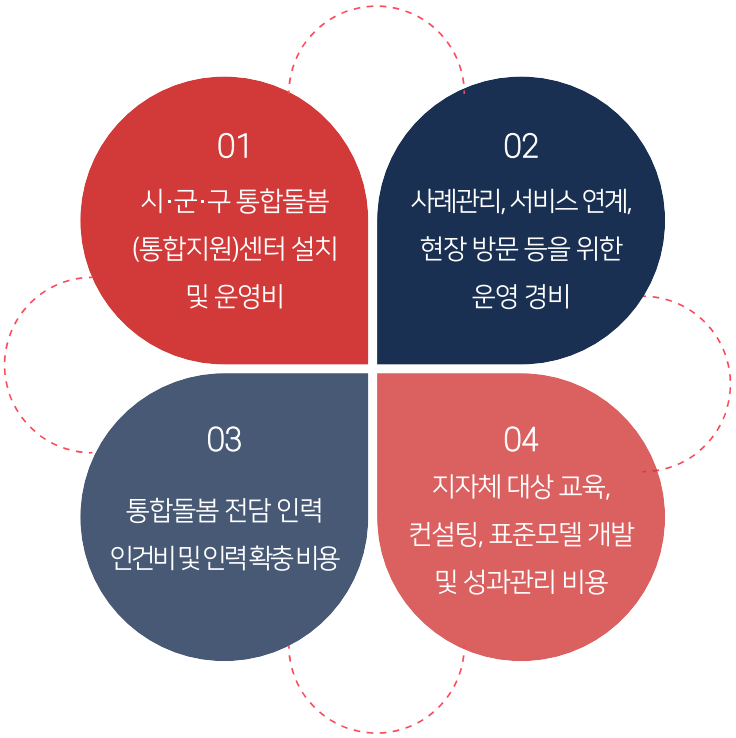


통합돌봄 예산 구조

중앙정부 예산 정부는 통합돌봄의 전국 확산을 위해 본사업 추진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약 914억 원 내외의 국비**가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국 시·군·구가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안(777억)에서 국회 확정안(914억)으로의 증액 근거

당초 정부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183개 지자체 위주의 지원을 계획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돌봄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는 원칙하에 전국 229개 시·군·구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약 137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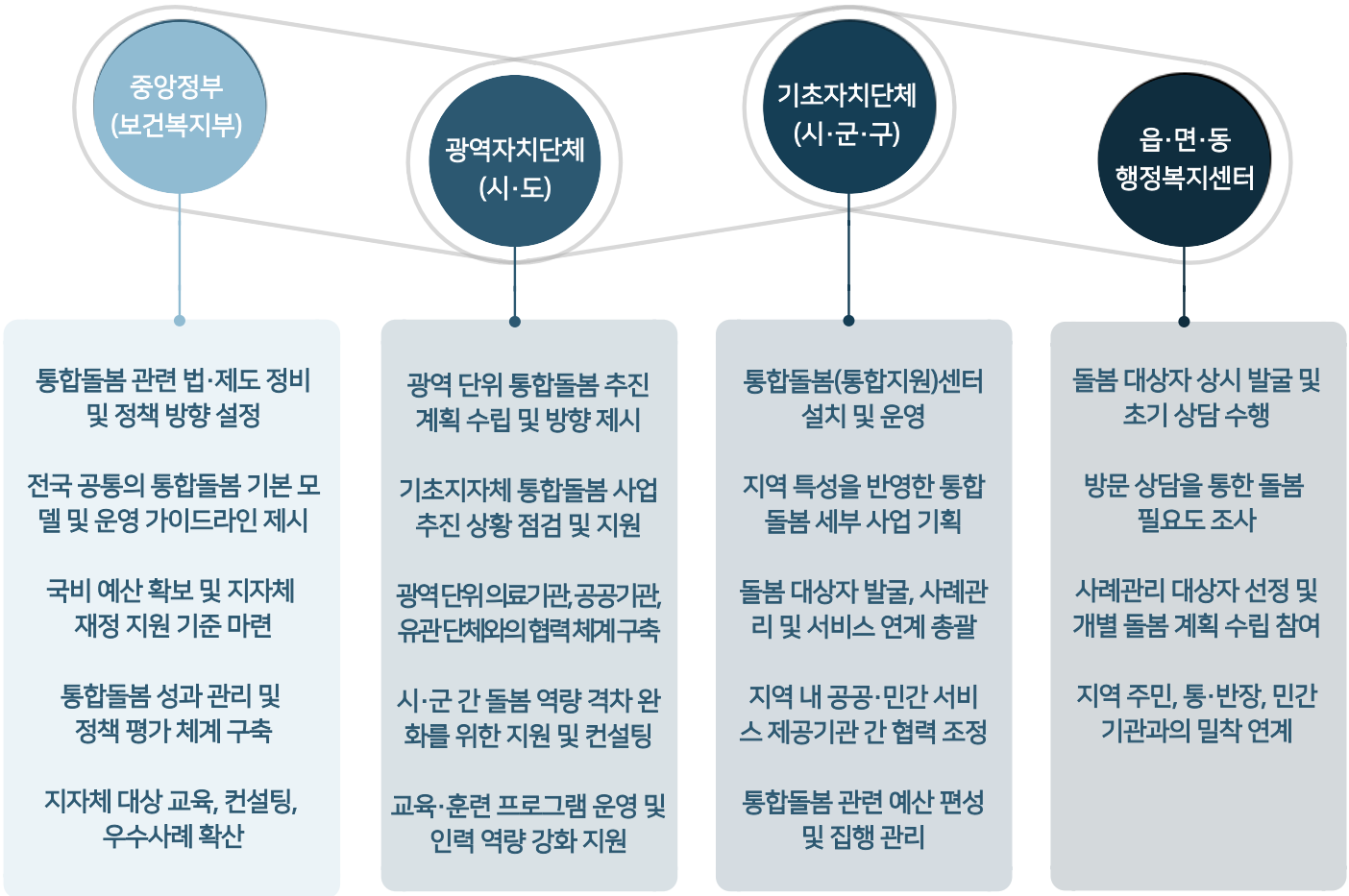
국비 주요 사용 항목

2026년 보건복지부 돌봄 관련 주요 예산

예산 항목	2025년	2026년	증 감	비 고
보건복지부 총예산	125조 4,909억	137조 4,949억	+9.6%	전체 국가예산의 약 19%
통합돌봄 사업	71억	914억	+1,187%	183개 → 전국 229개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	529억	신규	지자체별 서비스 격차 해소
노인맞춤돌봄 확대	5,394억	5,894억	+500억	대상자 확대 (55만 → 57.6만명)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2조 5,323억	2조 8,102억	+2,779억	대상자 확대 (13.3만 → 14만명)
보건소 노쇠 예방	-	20억	신규	노쇠 예방 프로그램 신설

통합돌봄 추진체계

통합돌봄 추진체계는 단일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읍면동–지역 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적 구조로 운영된다. 이는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행정·의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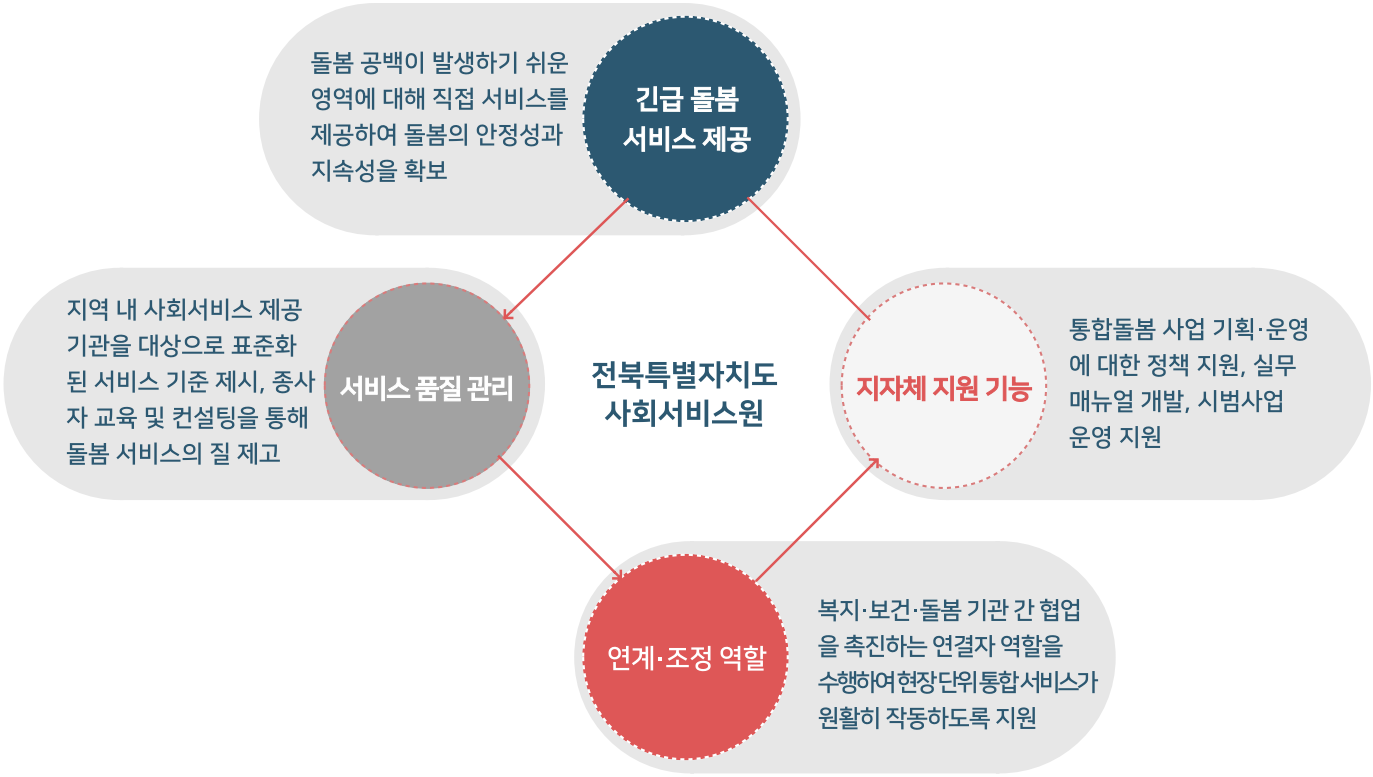
통합돌봄 전담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보건·돌봄 서비스 연계 및 대상자 관리 역할 수행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과 장애연금·활동지원 급여 관리를 통해 돌봄 대상자 지원 기반 마련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정책 연구 및 제도·사업 운영 지원
사회서비스원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및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현장 실행 역할 수행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통합돌봄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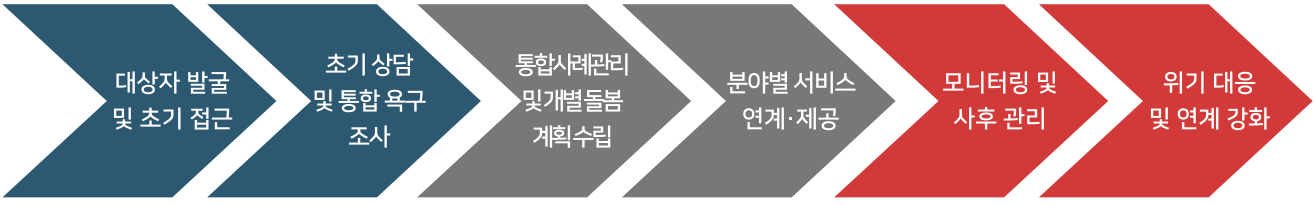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사회서비스원은 **통합돌봄 추진체계 내에서 공공적 성격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지원과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기관**이다



대상자 관점에서 본 통합돌봄 서비스 흐름

통합돌봄은 행정조직이나 개별 서비스 중심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삶의 과정과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하는 서비스 체계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는 대상자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운영된다.

단일 서비스가 아닌 '삶 전반' 평가 | **맞춤형 서비스의 유기적 제공** |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 대응**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전담기관 및 유관기관 등 지역 내 다양한 접점을 통해 발굴되며, 초기 상담을 통해 건강·돌봄·주거·경제 등 복합적인 욕구가 종합적으로 파악된다. 이후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자체 주관의 케어회의를 통해 개별 통합돌봄 계획이 수립된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방문의료, 재가돌봄, 도시락·생활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제공된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돌봄 계획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통합돌봄은 단편적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통합돌봄 준비

전북특별자치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농촌 중심의 지역 구조로 인해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요양·복지·주거·안전이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기존 체계로는 복합적인 돌봄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년 3월)에 대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추진 현황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현장 기반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도는 2023년 전주시 1개소에서 시작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2024년 2개소, 2025년 9월 기준 도내 7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며, 2026년에는 도내 전 지역으로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전달체계 정비와 서비스 연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는 돌봄사업의 전담 조직 구성 및 조례 제정을 독려하며 법 시행에 맞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 등 일부 시군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조례를 마련했으며, 전 시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 차원의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실행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의료·복지·요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6월 이후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2026년 기준인건비 예비 산정'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이 배치될 예정으로, 읍·면·동까지 최소 1명 이상의 인력이 배치되어 통합돌봄 현장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전북 내에서는 주민도움센터 등 복지 거점 인프라가 지역사회 돌봄의 최전선에서 기능하며, 민·관 협력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역 현실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의체 목적	구성 및 운영 방식	기대 효과
• **협의체 구성 배경** 전북도는 부서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던 복지 관련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기 위한 정책 협의·자문기구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와 통합지원법 제20조에 근거해 구성**	• **부서 간 정책 연계 강화** 기존에는 복지·보건·건설교통 등 부서별 개별 운영이 대부분이었으나, 정책 결정을 협의체 중심으로 합의·조정하여 사업 누락·중복 감소 및 효과성 향상을 도모
•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심의** • **추진사항 점검 및 조정** • **관련 기관 간 협력사항 조율**	• **초기 활동 계획** - 2026년 제1회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개최 - 통합돌봄 실행계획 심의 및 정책 방향 설정 - 통합 연계 로드맵 구체화	• **전문가 의견 반영** 의료·보건·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현장 중심 실효성 확보 및 전북 여건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

향후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통합돌봄은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만성질환자의 확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정책 전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돌봄 욕구가 건강·의료·주거·경제·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존의 개별 서비스 중심 정책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돌봄은 단기적 복지사업이 아닌, 지역사회 유지와 주민 삶의 질을 지탱하는 중장기 사회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은 지자체 중심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요양·돌봄, 주거, 고용, 정서 지원 등 여러 분야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통합돌봄의 특성상, 개별 기관의 역할 수행을 넘어 대상자 중심의 통합 사례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공공과 민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농촌 지역 비중이 높고, 의료·돌봄 인프라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통합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시·군에서는 일상생활 지원, 이동 지원, 방문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돌봄 모델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전북은 도시형 통합돌봄 모델을 단순히 적용하기보다는, **농촌·중소도시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의 통합돌봄 추진 사례는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역 내 의료·복지·돌봄 자원을 연계하고, 읍면동 중심의 대상자 발굴과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은 향후 도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평가된다. 이러한 선도 사례를 기반으로 시·군 간 정책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도 차원의 지원과 조정 기능을 통해 지역 간 추진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공공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민관 협력의 연결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 직접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민간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정책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돌봄 종사자 교육과 서비스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단위 통합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마련과 함께 전담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재 통합돌봄은 국비·지방비·기존 복지사업 예산이 혼합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의 재정 여건과 정책 추진 역량을 고려하여 통합돌봄 관련 재원 배분과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북형 통합돌봄의 향후 발전 방향은 지자체의 조정 역량 강화, 지역사회 자원의 적극적 참여,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협력 구조 구축에 달려 있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델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주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사례집」, 「의료·요양·돌봄 연계 모델 사례집」

보건복지부. 「2024~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설명자료」 및 정책 브리핑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관련 설명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사례 및 장기요양 연계 운영 자료」

한국사회서비스원·시도 사회서비스원. 「공공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및 통합돌봄 연계 역할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방향」 관련 내부 자료 및 설명자료

남원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 현황」 및 관련 보도자료

전북도민일보. (2025.) 「남원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구축…의료·복지 연계 강화」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395

한겨레. (2024.)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대 앞두고 예산·인력 과제 지적」

연합뉴스. (2024.) 「정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단계적 확대…지자체 역할 강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구조 및 국고·지방비 매칭 현황」

한겨레. (2025.12.03.) 「내년 통합돌봄 예산 914억…전국 시행엔 부족하다는 지적」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2661.html

연합뉴스TV. (2025.11.10.) 「복지부, 통합돌봄 예산 모든 시군구 지원 필요성 강조」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1110112216w0M